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낮추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겠습니다. : 「새도약기금 출범식」 개최

- ▲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 추진
 - 10월부터 대상채권 매입 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26년부터 소각·채무조정
 - 취약계층·소상공인 부채 부담 경감을 통한 “사람 살리는 금융”의 일환

1

출범식 개요

2025.10.1.(수)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용회복위원회 본사(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 새도약기금 명칭은 '25.7~8월 국민공모 접수(1,042건 접수)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

출범식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여당 간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정정훈 캠코 사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협약기관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행사는 개식 선언 및 출범 기념 영상 시청에 이어, 기금 대표이사 인사말 및 주요 귀빈 축사, 기금 설립보고 및 운영계획 발표, 협약식,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 (일시/장소) '25.10.1.(수) 09:00 / 신용회복위원회 본사(한국프레스센터)
- (참석) (국회) 강준현 의원 (정부) 금융위원장 등
(유관기관) 캠코 사장, 신용회복위원장, 새도약기금 대표, 협약기관장 등

협약 기관 (가나다 순)

- ① 농협중앙회, ② 산림조합중앙회, ③ 새마을금고중앙회, ④ 생명보험협회,
- ⑤ 서민금융진흥원, ⑥ 손해보험협회, ⑦ 수협중앙회, ⑧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⑨ 신한중앙회, ⑩ 여신금융협회, ⑪ 은행연합회, ⑫ 저축은행중앙회,
- ⑬ 한국대부금융협회, ⑭ 한국자산관리공사, ⑮ 새도약기금

이덕원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 19 이후 취약계층·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크게 확대 되었고 민생회복 지연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덜어 주는 제도를 넘어 장기간 빛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고 언급하였다.

“향후 ①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②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는 한편, ③소멸시효 제도 정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 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새도약기금은 정부의 포용 금융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수단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협약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모일 때 비로소 누군가의 재기가 가능해지고 더 건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국가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기금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캠코는 자산 관리자로서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국민 신뢰를 지켜 나가고, 국민들이 빛에서 벗어나는데 그치지 않고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축사에 이어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15개 협약기관 대표가 태블릿 PC에 마련된 새도약기금 협약문에 서명하였다. 협약문에는 새도약기금 지원대상, 채권 매입방식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각 금융협회 대표들은 소속 금융 회사의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 이후 진행된 현판 제막식은 강준현 의원, 이덕원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정정훈 캠코 사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참석하여 새도약기금의 성공을 기원하였다.

새도약기금은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하며 향후 1년간 협약기관 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하여 채무자의 보유 재산·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26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25년중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4조원, 총 수혜 인원은 113.4만명으로 추정된다.

* 소각 기준: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 無

**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 완료한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국민들은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 이후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는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 (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상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 하며,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중인 분들에 대해서는 은행권 신용 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또한, 금융위는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고용·복지 종합재기 지원 노력을 병행하고, 장기 연체자 발생이 근본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소멸시효 제도 정비 및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5년 4분기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요약)

[참고2] 새도약기금 주요 Q&A

[별첨1] 금융위원장 축사

[별첨2]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담당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책임자	과 장	송병관	(02-2100-2610)
		담당자	사무관	장원석	(02-2100-2611)
			사무관	이상원	(02-2100-2838)
공동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략사업단	책임자	실 장	한덕규	(051-794-3030)
		담당자	단 장	이해진	(051-794-3040)
			팀 장	최진원	(051-794-3060)
공동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	책임자	부 장	이상우	(02-750-1071)
		담당자	팀 장	도현호	(02-750-1075)



참고 1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요약)

〈 기본 방향 〉

- ◇ **취약계층·소상공인이 부채 부담을 덜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추진**
- ① **(새도약기금)**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채무조정
- ② **(형평성 제고)**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7년 미만 연체자,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별도 지원방안 마련
- ③ **(근본적 해결 병행)** 채무조정 외 고용·복지 지원을 연계하고, 연체채권 관리 개선을 통해 장기 연체채권 발생 최소화

〈 세부 추진방안 〉

새도약기금	〈 7년 이상 + 5천만원 이하 개인연체자 〉 √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채권 일괄 매입 → 즉시 추심중단 √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	
형평성 제고	〈 7년 미만 연체자 〉 √ 새도약기금 수준 채무조정 지원 (원금감면 최대 80%)	〈 채무조정 이행자 〉 √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 특례 대출 지원
근본적 해결 병행	〈 고용·복지 연계지원 〉 √ 채무조정·금융지원 외 고용·복지 종합재기 지원	〈 연체채권 관리 개선 〉 √ 소멸시효 제도 정비,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추진

참고 2 새도약기금 주요 Q&A

1. 열심히 빚을 갚아온 성실상환자의 박탈감이 있는데?

-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불만에 대해서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
 -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어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것
 - 사회 약자 지원 및 사회 통합, 정상적 경제 활동으로의 복귀를 돕고, 불법 사금융과 같은 범죄로부터의 예방도 필요
- 정부는 성실 상환자와 형평을 감안해서 감면 기준을 설정
 -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해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
- 한편, 성실 상환자의 경우 이자를 감면하거나 만기일을 연장하거나 저리자금을 지원하며,
 - 상환능력을 상실하지 않았지만 부채 상환 부담이 있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촘촘한 제도를 마련

< 성실상환자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 >

-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24년 완료)**
 - 은행권 자율로 총 1.5조원 이자 환급(1인당 최대 300만원), 중소금융권 총 0.2조원 이자 환급(1인당 최대 150만원)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24.12월)**
 - 상환 어려움 예상시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금리감면 등을 지원
 - 폐업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최대 30년) 및 3% 수준 저금리 지원
- **금리경감 3종 세트(‘25.9월)**
 -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
 -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
 -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적용

2. 앞으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는데?

□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가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장기 연체시 그에 상응하는 추심 고통이 따른다는 점,
신용 활동 제약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 어려운 점 고려*

* 예) 급여압류, 통장압류, 직업변경, 단순 일용직 외 취업곤란 등

○ 과거 채무조정이 이루어진 현장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면,
고의로 연체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

■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기고中)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시행한 채무면제 사업의 실제 사례를 보면 채무 면제를 악용하거나 성실 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유발할 만큼의 도덕적 해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 다만,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여 지원 받거나, 부도덕 행위와 관련한 부채 조정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는 만큼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

① 관계부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소득·재산 등) 심사

② 채무조정 지원이 적절치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매입하지 않거나, 지원 결격사유로 명시

* ① 주로 주식투자로 부채가 발생하는 금융투자업권은 매입 범위에서 제외
② 사행성·유형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채무 등

③ “은닉재산 신고센터(www.newleap.or.kr)” 운영을 통해 부정감면자 발견시 감면 조치를 무효화하고, 신정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여 신용거래상 불이익 조치(→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상거래에서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예: 대출사기, 보험사기, 신용카드 범죄, 대포통장 양수도 등)

3.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채권은?

1. 사행성·유형업 채권

-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금융회사가 업종 코드를 통해 사행성, 유형업 여부 확인 후 매각

2. 외국인 채권

- 외국인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원칙 제외
 - 다만, '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및 난민인정자는 지원

< 지원대상 제외 채권 >

- ① 개인사업자의 업종이 사행성/유형업으로 확인되는 채권
- ② 외국인 채권 (단,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은 지원 ※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
- ③ 소멸시효 완성 채권
- ④ 금융질서문란자 채권 등

4. 새도약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별도 신청 절차는 없음

-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며,
 - 채권 매입, 상환능력 심사 완료시 채무자에 대한 별도 안내가 있을 예정

5. 나의 채무가 매입 또는 소각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 ① (홈페이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에서 채권 매입 및 소각 여부 확인 가능
 - 다만 채권 매입은 '25.10월말부터 금융업권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그 이후부터 조회 가능
 - 또한 상환능력 심사 상황 및 심사 결과(소각/채무조정 분류)도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
- ② (SMS 등)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연체채권 매각시 채무자에게 통지하며,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 심사 결과를 개별 통지
- ③ (콜센터·상담센터) 새도약기금 콜센터(1660-0705) 또는 전국 12개 상담 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

*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및 제주지사

6. 부양가족 인정이 가능한지? 생계형 자산 인정이 가능한지?

□ (부양가족) 인정 가능

- 상환능력 심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실시되며, 동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를 채무자에게 SMS 등으로 개별통지 예정
- 1인 가구 소득 기준을 상회하였으나 채무자가 부양가족 인정을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본 등을 제출하여 부양가족 인정 가능

□ (생계형 자산) 인정 가능

- 상환능력 심사시 새도약기금 기준에 따라 생계형 자산 보유 여부를 판단하며, 동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를 채무자에게 SMS 등으로 개별통지 예정
- 생계형 자산 추가 인정이 필요한 경우, 확인 가능한 서류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소명 가능

< 생계형 자산(예) >

구 분	세부내용
토지	· 1,000m ² 이하이고, 공시지가 2,000만원 이하 농지, 양어장, 염전 · 상속받은 선산 등
주택	· 채무자 소유의 주택가액 또는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
차량	· 차령 10년 이상 / 1톤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 등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가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차량
어선	· 어업인으로 등록된 자가 소유한 1t 이하 생계형 어선
금융자산	· 185만원 이하

7. 공공기관에 채무가 있는데 매입 대상인지?

- 공공기관 보유 채권도 원칙적으로 매입 대상
 - 공공기관이 채권자인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도 재기 지원이 필요하며,
 - 새도약기금에서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 후 상환능력 등을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형평성에도 부합
 - 특히 보다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새도약기금이 채무자의 금융자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정법 개정도 추진중

8. 금융권 기여는 확정되었는지?

□ 금융권은 총 4,400억원을 기여할 예정

* 기여 금액(억원) : (은행) 3,600 (생보) 200 (손보) 200 (여전) 300 (저축) 100

○ 각 금융회사는 이사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새도약기금의 연체 채권 매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기여금을 납입할 것으로 예상

9. 1인당 5천만원 이상 채무가 매입될 경우 처리방안은?

1인당 5천만원 한도로만 소각할 계획

- 다중채무자의 경우 매입채권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될 수 있으나, 1인당 5천만원 초과 매입분은 캠프로 매각하여 캠프의 일반적인 채권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

10. 채무조정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
 - 채무 조정을 통해 장기 연체자들의 제도권 경제 복귀를 돕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이 가능
 -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분들로 범죄 예방에도 도움
- 해외 연구들도 채무 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다수 확인
 - 소비 증가 등 경제적 성과(소득, 고용, 주택보유율 증가)가 장기간 지속되고, 사회적 안정(고용 안정, 사망률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

< (해외 연구) 채무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 >

- **“Consumer Debt Moratoria” (Bulent Guler & Yasin Kursat Onder & Mauricio Villamizar-Villegas, Jose Villegas, 2024)**
 - 채무유예(조정) 정책은 가계의 소비 진작 효과뿐만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쳐 사회 전반적인 건전성 제고에 도움
- **“The Long-Run Effects of Individual Debt Relief” (CESifo, 2024)**
 - 덴마크 법원의 개인채무구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소득 26% 상승, 취업률 11.7%p 증가, 수년간 자산·주택 보유율이 상승하였으며, 채무구제가 최대 25~34년 동안 지속되는 장기효과를 보임
- **“Macroeconomic Effects of Debt Relief: Consumer Bankruptcy Protections in the Great Recession” (NBER: Auclert, Dobbie & Goldsmith-Pinkham, 2019)**
 - 개인파산을 통한 채무탕감이 경기침체기 고용 안정에 기여하며, 전국 차원에서 고용 2% 상승 효과 추정
- **“Debt Relief and Debtor Outcomes: Measuring the Effects of Consumer Bankruptcy Protection” (NBER: Dobbie & Song, 2014)**
 - 파산 승인이 난 경우 연간 소득 \$5,562 증가, 5년 내 사망률 1.2%p 감소 및 주택압류율 19.1%p 감소
- **“Reducing debt improves psychological functioning ... Singapore” (PNAS, 2019)**
 - 개인에 대한 채무해소가 인지능력 향상, 불안감 11% 감소